

산업계, R&D 세액공제 “애걸복걸”

2012년 말 일몰 앞두고 연장 요구 ... 투자·고용 긍정효과 억지강조

산업계는 2012년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인 연구·개발(R&D)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·확대해야 한다고 5월14일 주장했다.

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벤처기업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중견기업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는 <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&D 세액공제>와 <R&D 설비투자 세액공제> 등 2012년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제도를 현행처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.

또 <일반 R&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>, <중견기업 R&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>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고 <중소기업 연구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>, <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&D 장려세제> 등도 제안했다.

전경련의 관계자는 “국가 R&D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R&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실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(-5.1%)과 유럽(-2.6%)의 기업들은 R&D 투자를 축소했으나 국내기업들은 R&D 투자를 8.3% 늘렸기 때문에 전자·자동차·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이다.

우리나라는 2010년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3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6.2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.

또한 R&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.

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“국내기업들의 지속적인 R&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세제혜택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확대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다른 관계자는 “미래 유망한 녹색과 에너지, 바이오, 융합 산업 등은 대규모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지만 최근 R&D 세제지원의 축소 움직임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14>